

##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공황의 영향: 정치경제학적 접근\*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우택(한림대 경제학과)\*\*

- I. 들어가면서
- 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공황
- III. 대공황의 해석과 평가: 재앙이었나, 행운이었나?
- IV. 브라질의 경험
- V. 아르헨티나의 경험
- VI. 양국 경험의 비교와 시사점
- VII. 맺음말

### I. 들어가면서

1930년대는 라틴아메리카 발전에서 중대한 전환기로 간주된다. 1929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비교하여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은 단히고1), 제조업 분야에서 수입 대체적 공업화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 및 다른 사회적 목표를 위해 공공정책이 동원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1994-09)에 의해 연구되었음.

\*\* Woo Tack Kim(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wtkim@hallym.ac.kr), "The Effect of the Latin American Great Depre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1) 1929년의 일인당 교역량 지표는 1960년대에 가거나 회복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출주도 성장의 시대는 192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 칠레, 쿠바, 브라질 같은 일부 국가들에게는, 20년대 말 전통 수출상품에 대한 대외수요의 한계가 드러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대체적으로 주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유례없는 수출 붐을 누렸다.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은 1929년까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계속되었으며 국제수지는 흑자 내지 균형이 정상이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도 금본위제도로 복귀했고,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대외/대내 균형은 1929년 시작된 일련의 강력한 외부 쇼크로 여지없이 깨졌으며, 1930년대 경제사의 대부분은 국제수지의 조정과 국내 경제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노력 중심으로 쪼개어지게 된다.

우리는 ‘대공황=재앙’이라는 등식을 무의식중에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충격도 어디서나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따라서 대공황이라는 경제에의 큰 충격이 선진국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재앙이었는지는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대공황은 재앙이었나 하는 질문은 대공황의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나에 관한 사실 확인의 문제와 대공황의 영향 혹은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나 하는 평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질문이다. 영향 평가의 문제는 시간 지평에 따라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충격의 성격이 대공황의 진원지인 선진국에서와 같이 내재적 모순의 폭발이나 아니면 라틴아메리카에서와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이냐에 따라 대공황 분석의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대공황의 직접적 충격이 혁명과 대외채무위기였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틀림없는 재앙이었다. 그러나 그 충격이 경제구조에 변화를 강요했다면, 그 구조변화에 따른 중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경제구조뿐 아니라 경제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치 및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경로를 통한 간접적 대공황의 영향평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는 본고는 II장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공황의 파급과 본질을 논하고, III장에서 라틴아메리카 대공황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평가를 소개하면서 중기적 관점을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을 제기한다. IV장과 V장에서는 각각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공황의 경험을 1930년대 뿐 아니라 그 정치적 유산까지 포함하여 살펴본다. VI장에서는 양국의 경험을 비교하고, VII장은 본고의 논의를 요약한다.

## 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공황

### II.1. 대공황의 파급

1920년대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기존 자유무역 정통에 대한 비판자들은 선진국 중심부에서 집중하는 보호주의 조짐에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주요 수출상품의 점진적 가격 하락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는 ‘검은 목요일’ 2년 전부터 그 조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대외채무 불이행이나 이윤 송금의 제한과 같은 징후를 보이기 훨씬 전인 1928년에 시작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유입의 급감이나 해외직접투자의 감소도 위기를 예고하는 징후였기에 대공황이 쇼크이기는 하더라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것만은 아니었다.(Marichal 1989, 201)

1929-33년의 세계 경제의 붕괴는 무엇보다도 상대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라틴아메리카에 전달되었다. 달러화 표시 수출 가격은 달러화 수입 가격에 비해 훨씬 많이 떨어졌다. 4년 동안에 21-45%에 달하는 교역조건 악화를 기록했으나 수출물량의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위기는 자본 계정을 통해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국제수지를 교란했다. 1930년 이후 총자본 유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예기치 못한 수출가격의 하락은 외채상환의 실질비용을 상승시켰고, 수입능력은

교역조건에 반영된 것 이상으로 위축되었다.

선진국 경제위기의 또 다른 파급 경로는 선진공업국들이 앞 다투어 도입한 보호주의적 정책이었다.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 정책은 그것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교역조건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 이상의 효과를 갖는 어찌면 1930년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게는 가장 큰 쇼크였을 수도 있다. 192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기 시작한 보호주의 물결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통과로 구체화되었고, 영국에서도 1931년(비상 수입법)과 1932년(영연방 특혜관세법)에 잇달아 보호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보호주의가 급기야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모든 선진국으로 확산되었다. 선진국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그 때까지의 약속과 책임의 포기로 또 하나의 지나가는 불황일 수도 있었을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은 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보호관세장벽과 차별적 조치들 하에서는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들은 선진국 시장에서 특혜관세를 누리는 그들의 식민지들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라틴아메리카는 1920년대에 누렸던 수출주도 성장을 재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적 실험을 강요받게 된 셈이다. 선진 공업국들의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대한 배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래 기억되게 된다.

## II.2. 대외채무위기와 정치 불안

경상수지의 급격한 악화와 외국자본 유입의 중단,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의 실질적 부담 증가 등은 금본위제도 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금 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1929년에서 1931년까지 3년 사이에 1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선진국 경제의 여건 변화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본 수입국에서 하루아침에 순 자본 수출국이 되도록 강요된 것이다. 결국 대외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1931년 1월 볼리비아에서 시작된

채무불이행은 5월에 페루, 7월 칠레, 10월 브라질로 이어졌다. 1934년에는 아르헨티나,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만이 대외채무에 대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쿠데타와 혁명을 경험했다. 쿠데타와 혁명이라는 정치 불안 그 자체도 재앙이나 이를 유발시킨 그 배경의 사회경제적 불안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 절실한 문제였다. 대외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결국에는 실업과 명목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II.3. 1930년대 위기의 본질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약화시킨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인은 수출수입의 급격한 감소였다. 대외무역과 금융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은 외환통제, 재정지출 삭감, 주요 수출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이었다. 사실 공황의 초기(1929-30)단계에서는 국제적인 은행들이 라틴아메리카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1931년의 국제적인 은행위기로 야기된 지급청구의 쇄도(bank run)와 주요 은행들의 도산은 결국 모든 해외차관을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선진국에서의 대공황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공황의 성격차이다. 대공황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대공황은 자체 경제시스템에 내재된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산된 위기인데 반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순수하게 외부충격에 의해 야기된 위기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대공황 연구도 선진국들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그 것이 어떻게 그 같은 재앙으로 확대될 수 있었느냐 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초점이 모아져왔다.<sup>2)</sup>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

2) 테민 명제로 알려진 대표적 대공황의 원인분석(Temin 1989)은 대공황이 큰 충격과 불안정한 파급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주장이다. 아이켄그린(Eichengreen 1996)은 후자에 무게를 둔 설명을 제시했다. 전전과는 달라진 전간의 상황, 즉 노동시장과 상품(commodity) 시장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유연성 상실, 험사리 쇼크를 수

공황 연구는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무엇이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모아졌다. 둘째로는 그 외부충격이라는 것이 교역의 위축과 자본이동의 중단이라는 경로를 통해 야기된 외환부족사태였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대외채무위기였다는 것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고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다른 대외채무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험이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질문은 “대공황은 특별한 대외채무위기였나? 특별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 III. 대공황의 해석과 평가: 재앙이었나, 행운이었나?

경제사학자 테민 교수의 명저 『대공황으로부터의 교훈』(1989)은 “1930년대의 대공황은 현대경제사의 분수령이다. 그러나 이는 처칠 경이 ‘제2의 30년 전쟁’이라 명명한 세계사의 중요한 분수령의 한 국면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로빈스(Lionel Robbins) 경의 통찰에서 유래하는 대공황에 대한 이같은 시각은 대공황을 역사적 전후관계에서 보게 한다는 면에서 교훈적이며 유익하다는 것이다. 1914년에서부터 30여 년 간 계속된 대립과 마찰의 한가운데 있었던 불안한 휴전 상태였던 대공황 에피소드의 중심이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었다는 것이며, 이는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과국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지금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사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사가들에게는 이 같이 1930년대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다. 끈세이상오 따바레

---

용하지 못하는 시스템, 정부의 신뢰성 결여 등으로 인해, 시스템에 교란 발생 시, 안정화 방향으로 이동하던 금융자본이 도피하면서 작은 교란이 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금본위제도 하에서(고정환율제 하에서) 충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디플레이션(deflation)인데, 만약 가격이 경직적이라면 불황(depression)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프리드만(Friedman and Schwartz 1963, ch.7)은 일찍이 대공황을 금융정책의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스(Conceição Tavares 1972, 32)는 “1914년에서 1945년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합치면 20년이나 되는 전쟁과 대공황으로 야기된 국제 무역의 반복된 위기로 말미암아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1930년대의 장기화된 위기는 일차산품 수출 모델의 기능정지를 고하는 결정적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제2의 30년 전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대공황을 양차 세계대전으로 얼룩진 30년 동안의 한 국면으로 이해했고, 라틴아메리카에게는 경제 발전 모델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29년 이전과 이후간의 대비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1930년대의 사건들이 무역과 정부 재정에 대한 이 지역 국가들의 태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공황 동안 적어도 몇몇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미국에 비해 또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일차산품 수출경제에서 기대되는 성과에 비해 놀라우리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어, 이들 국가들이 위기에 비교적 잘 대처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그런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중 가장 현란한 것은 프랑크(Frank 1969)의 주장이다. 1930년대의 라틴아메리카는 신고전파 정통이론과는 달리, 중심부가 약하여 제국주의적이고 저개발적인 지배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주변부가 공업화되고 번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허쉬만(Hirschman 1958)도 양차 대전과 공황 동안의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에 영향 받아 저개발 국가의 외환 수입의 기복은 모종의 중요한 발전 메커니즘을 가동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카프카(Kafka 1961)는 몇몇 라틴아메리카 상황 하에서 대공황이 성장 촉진적 불균형이었음을 예시했다. 그도 허쉬만과 비슷하게 불리한(adverse) 쇼크의 최적 수준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했다. 후르타도(Furtado 1959)는 브라질의 경우 ‘케인스 이전의 케인지안’ 정책으로 대공황으로부터 조기 회복되고 산업화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Díaz-Alejandro 1982, 334)

밖에서 보기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1920년대에는 이미 지역 내 국가들 간에 개방도 및 공업화 정도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대공황의 결과로 나타난 대외거래의 위축과 실질적 대외 경쟁의 부재상황은 일부 대국경제에게는 수입 대체적 공업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견해는 브레셰르 베레이라(Bresser Pereira 1972), 디아스 알레한드로(Díaz-Alejandro 1983)와 오르티스(Ortiz 1993)에서 두드러진다. 그들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대공황을 명백한 축복으로 보았다. 새로운 경제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della Paolera and Taylor 1998, 7). 따라서 중기적 시각에서 보면 대공황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아스 알레한드로가 한 것 같은 능동적 대국으로의 일반화(1982, 339-345)는 자칫 중요한 점을 놓치게 하는 함정이 있다. 사실 대공황에 대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대응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공황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의 성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서의 정치적 상황전개가 상이했다. 이러한 차이가 전후 양국의 정치 경제 발전경로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것이 장기적 시각에서 본 대공황의 영향일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정치 실험의 결과로 구축되는 정치질서와 경제발전 모형이 남기게 될 유산인 포퓰리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즉, 대공황이 행운이었던지는 새로 채택한 모형의 성과와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이다.

#### IV. 브라질의 경험

##### IV.1. 대공황의 파급<sup>3)</sup>

1920년대 브라질 경제의 역동성은 커피 수출 붐에 근거하고 있었다. 전체 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은 1919년의 56%에서 1924년에는 75%

3) 이 부분에서는 주로 Baer(1979, 39-45)의 설명을 따랐다.

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GNP에서의 수출비중도 5.7%에서 12.5%로 높아졌다. 1920년대의 국제수지 호전에 기인한 통화의 평가절상과 국내 물가의 상승은 제1차 세계대전 이래 꾸준히 성장해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1920년대는 제조업 부문의 저 성장 시기가 되었다. 산업생산 평균 증가율이 1910년대의 4.6%에서 3%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생산 활동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실질GNP는 연평균 3.9%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투자 활동의 척도가 되는 철강과 시멘트의 소비가 급증하고, 자본재의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커피 붐 하에서 값싸고 질 좋은 외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섬유 식음료 등 소비재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수입품에 국내시장을 그대로 내주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시장을 되찾기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섬유 산업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섬유류 생산은 1920년대를 통해 오히려 감소했지만 섬유기계의 수입은 1910년대의 연평균 4,277톤에서 1920년대에는 8,654톤으로 2배 증가했다.

브라질 경제에 대한 대공황의 충격은 커피 가격의 하락과 수출수입의 감소로 전해졌다. 총 수출은 1929년의 4억4천6백만 달러에서 1932년에는 1억8천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1931년의 커피 가격은 1925-29년 간 평균가격의 삼분의 일로 떨어졌으며,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수출의 구매력은 1932년에는 1929년 대비 63%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게다가 1926-28년간에는 연간 2천5백만 파운드를 상회하던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932년에는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3억 달러(1931년 기준)에 달하는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브라질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받는다. 1931년 8월 채무재조정 협상에 들어간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환 및 기타 직접 규제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꼬루제이로<sup>4)</sup> 화의 평

4) 당시의 화폐단위는 헤알(real), 실제로는 천 헤알(mil-réis, 밀-헤이스)이었으나, 대부분

가절하를 단행하여 국제수지 방어에 나서게 된다. 수입은 1929년의 4억 1천7백만 달러에서 1932년에는 1억 8백만 달러로 감소한다.

1929년 커피수출은 전체 수출의 71%를, 수출은 GNP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공황의 충격이 전해질 때, 정부의 관심은 당연히 커피산업을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쏠리게 되었다. 문제는 공황에 따른 커피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 급감만이 아니었다. 1920년대에 늘려 심은 커피나무들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생산량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제 국제 커피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으로부터 커피산업, 나가서는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때까지 주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던 커피가격지지 프로그램이 연방정부로 이관되었다. 1931년 5월에는 국가커피위원회(Conselho Nacional do Café)가 설립되었고, 정부는 모든 커피를 수매했다. 그러나 팔 수도 저장할 수도 없는 대부분의 수매 물량이 폐기처분되었다. 커피 산업에 대한 또 다른 정부지원은 농가들의 부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였다. “경제재조정”(Reajustamento Econômico)으로 불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 부채는 절반으로 줄었다.

브라질 농업에 대한 대공황의 충격을 완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면화 생산의 급성장이었다. 1920년대에 상파울로 정부가 추진한 면화 품종 개량 연구가 결실을 거두어 섬유질이 향상되었고,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신품종이 보급 재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1933년 이전 연 1만 톤을 밀돌던 면화 생산이 1934년에는 9만 톤에 이르렀다. 브라질의 세계시장 몫도 1929년의 2%에서 1940년에는 8.7%로 급격히 증가했고, 브라질 수출에서의 비중도 2.1%에서 1930년대 후반에는 18.6%로 늘었다.

커피부문의 지지정책과 면화생산의 선전 덕분에 수출부문의 소득은 유지될 수 있었고, 대공황의 바닥인 1932년의 브라질 일인당 실질소득은 1929년에 비해 11% 감소하는 데 그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

의 대공황연구와 통계자료들이 1942년 11월부터 밀-헤이스를 대체하는 꼬루제이를 화폐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관행을 따른다.

IV.2. 대공황과 브라질경제의 도약<sup>5)</sup>

브라질 경제의 도약은 역설적이지만 공황이 가져다준 공업투자 기회와 ‘1930년 혁명’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30년대에 시작된다.<sup>6)</sup> 브라질의 경제 정치 사회사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1930년 혁명’의 근본적 의미는 4세기 동안 브라질을 지배해온 - 식민지 시대에는 포르투갈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독립 이후에는 선진공업국 특히 영국의 상업적 이해와 연합하여 - 수출농업에 기반을 둔 과두지배계층의 세력을 해체했다는 사실이다. 1889년의 공화국 선언처럼, ‘1930년 혁명’은 다른 아닌 중산층 혁명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혁명과는 달리 ‘1930년 혁명’은 당시로는 성공적 혁명이었다. 그 이후 브라질 농상 과두지배계층은 수세기 동안 차지했던 권력의 일부조차도 되찾지 못했다.

1930년에 들어선 정부는 브라질 정치와 경제의 개혁 이상에서 자기정체성을 찾았다. 처음부터 귀족층과 전통적 중산계층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특히 이들이 권력탈환을 시도했던 ‘1932년 혁명’ 때부터 정부는 새롭게 부상하는 계층들 - 광범위한 노동법 제정의 수혜자인 도시 프롤레타리아,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으로 덕을 본 새 중산층, 그리고 신흥 산업자본가 - 의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는 곧 분명한 공업화 정책을 채택했다. 당시 브라질 정부는 경제 분야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별로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긍정적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사실 브라질 경제의 도약과 공업화를 자극한 정부 조치들은 우연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1930년 혁명’으로 태어난 정부

5) 도약기(Take-off stage)는 로스토우(Rostow 1960)의 성장 단계론의 제3단계로서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수반하는 경제구조의 본질적 전환기이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경제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의 특징은 저축률, 투자율, 공업성장의 도약 혹은 점프라 할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증가이다. 로스토우는 브라질의 도약기를 상파울로 주는 1900-28년으로 경제전체로는 1933-50년으로 보았다.(Rostow 1978)

6) 이하의 설명은 1930년대를 브라질 경제의 근본적 변혁의 시기로 인식하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브렛세르 페레이라(Bresser Pereira 1972, 35-39)를 따랐다.

가 그 이전의 정부들과는 달리 공업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졌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 정부가 공업화를 위해 취한 갖가지 조치들과 1930년대 말 볼타헤돈다(Volta Redonda)제철소의 건설을 더한다면, 이 혁명이 브라질 산업혁명의 시작을 설명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브라질 경제도약의 시작을 설명하는 두 번째 근본요인이 바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따른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역설적이기도 한 엄청난 공업투자 기회의 발생이다. 이 요인이 아니었다면, ‘1930년 혁명’은 아마도 성공할 수 없었고, 나라는 전통적 경제행태를 보이는 수출농업 과두지배 하로 회귀했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 혁명’은 떼네티즈모(tenentismo)와 산업화(industrialismo)의 결합으로 성공했던 것이다. 군부 내에서 중산층 개혁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세력인 하급 장교들의 정치운동으로서의 떼네티즈모와 개혁의 최대수혜자가 될 민족 산업자본 신흥부르주아들의 산업화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세계적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 요인 덕택이었다. 첫째는 브라질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가 위축되지 않았고, 둘째로는 대내 구매력은 유지되면서 대외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이다.

#### IV.3. 후르타도 명제

1930년대 브라질에서 어떻게 수요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 분석한 후르타도 명제(1959)는 이미 고전이 된 연구이다. 그는 당초 위기가 발생했을 때, 환율을 통한 전통적 경제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했지만 충분치는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위기로 커피 가격은 하락했고, 통화는 평가절하 되었다. “국제 커피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태환체제의 붕괴는 통화의 대외가치 하락을 가져왔다. 당연히 통화가치의 하락은 커피 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커피의 국제 가격 하락은 60%에 이른 반면, 환율은 40% 평가절하되었다. 그러므

로 손실의 대부분은 수입가격의 인상을 통해 사회 전체로 이전될 수 있었다.”(Furtado 1971, 187-188.) 커피 가격의 하락은 25%의 수출 물량의 증가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커피 생산을 흡수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확과 유통비용(즉, 변동비용)을 충당하는 한 생산자들은 생산과 수확을 계속한다. 가격이 변동비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제적 혼란에 봉착하게 된다. 커피 생산자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되찾게 된다. 이로서 위기로 야기된 예외적으로 심각한 조건 하에서는 “환율 메커니즘이 커피경제의 효과적 방어수단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커피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 때문에, 판매량은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팔리지 않는 재고가 가격하락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찾아낸 해결책은 정부가 재고를 매입해 잉여분을 소각하는 것이었다. 커피경제의 방어라는 목표 하에서, 커피가 계속 수확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식이었다. “일견 커피를 파기하기 위해 수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최저수매가를 보장함으로써 실제로는 수출경제와 간접적으로는 국내시장에 연계된 생산부문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수출부문의 명목소득이 대폭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업의 승수효과를 경제의 여타 부문에 비례적으로 분배한 셈이다. [……]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파괴되는 커피의 가치가 생성되는 소득에 비해 훨씬 작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는 후에 케인스(Keynes)가 보여줄 유명한 피라미드를 세운 것이다.”(Furtado 1971, 190-192) 다시 말하자면, 나중에 소각할 재고에 비생산적 투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문제는 생산증가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수준의 유지를 위한 그러니까 총수요수준의 유지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위기 시, 즉 갈 데 없는 잉여가 발생할 때는 언제나 이 같은 비생산적 투자가 도움이 된다. 물론 고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생산증가와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생산적 투자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해결책은 쉽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가 때로는 그렇게 신축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총수요 수준의 유지를 염두에 두었는지 아니면 단지 위기에 처한 커피농업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은 아직 집필되지 않았고, 우연히도 브라질 정부가 케인지안 정책을 사용했고 대공황 중 총수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 IV.4. 수입대체, 공업화, 경제성장

이 단순한 총수요 유지가 1930년 초 공업투자의 절호의 기회 등장에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수입공산품 가격의 수직상승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파운드화에 대한 브라질 통화의 가치는 1933년도의 파운드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50% 떨어졌다. 이는 커피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에서의 커피 가격은 1929년 파운드 당 22.5센트에서 1931년에는 8센트로 떨어졌다. 커피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을 확인하듯이 수출 물량의 증가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수출수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1920년대 8억 6백만 파운드에 달하던 브라질 수출액이 1930년대에는 그 44% 수준인 3억7천7백만 파운드에 그쳤다. 커피 부문 보호정책에 힘입어 대내 구매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외 구매력의 수직 하락의 결과는 수입 공산품 가격의 50% 가까운 상승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1929-34) 동안 국내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7% 내린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사실상 소비재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국내기업들에게는 공업 분야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기업들의 기존 유희설비는 곧 활용되었다. 이미 국내산업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던 바르가스 정부는 1931년 3월 생산과잉 상태라고 판단되는 모든 산업을 위한 기계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정착된 섬유산업의 보호를 겨냥한 것이었다.

새로운 분야에 신규투자도 이루어졌다. 대부분 작업장 수준의 공장으로 시작했고, 필요한 자본은 가족들 사이에서 조달했다. 그러나 곧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다. 초기에는 브라질 내에서 생산 가능한 단순 장비를 요하는 소비재 산업에 국한되었다.

1928년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공업생산이 1931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그 후 8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1939년 통계자료는 섬유산업, 금속제품과 종이제품으로 각각 1929년 대비 147%, 298%, 682%라는 놀라운 성장을 했다. 하지만 자본형성 지표로 눈을 돌려보면, 투자는 1930년대 중반까지도 192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1932년 자본재 수입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기록한 최저수준 가까이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했으나 1920년대 호황기의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멘트와 철강소비는 1931년에 바닥(1929년 대비 44%와 28%)을 친 후 1937년에 이 전 최고치인 1929년 소비수준을 회복했다. 요약하면, 1930년대 전반기의 공업성장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1920년대에 투자되었으나 낮은 가동률을 보이던 기존 생산시설의 활용에 근거한 것이었고, 1930년대 후반기의 공업성장은 시설확장을 수반한 것이었다. 철강, 시멘트, 종이 생산설비의 확장은 괄목할 만했다. 1920년대에 4,697개 기업이 제조업분야에서 창업했으나, 1930년대에는 12,232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브라질의 공업발전이 시작된 것이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던 실질국민총생산은 1932년에는 1928년의 최고치를 경신한 후 1939년까지 연평균 5.6%로 급성장했다. 이는 1920년대의 수출 붐 시절의 성과를 능가하는 속도이다. 당시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경이로운 성장을 견인한 동력은 제조업에서 나왔다. 제조업은 연평균 8.6%로 성장한 반면, 농업생산의 증가는 그 절반에 그쳤다.

7) 1931년 바닥을 보인 실질GNP는 1928년 대비 3.6% 감소했으나 명목GNP는 같은 기간 동안 23.9% 하락했다.(부록의 표 참조)

## IV.5. 1930년대에 대한 평가

브라질의 경험으로는 대공황이 재앙이었나 아니면 행운이었나 하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벨라에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면에서 1945년 이전 브라질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산업화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45년의 브라질의 낙후성의 설명은 공업화의 낙후 원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Peláez 1971, 7)라면서 1930년대를 실패로 평가한다.

휘실로우의 평가는 단기와 장기에서 엇갈린다. “대공황의 십여 년 동안 브라질은 산업화로의 길을 상당 폭 넓혔다. 기본적으로 국제 여건과 그 이전의 커피 대량생산의 결과로 수입품들의 가격은 상승했고, 이들 수입품을 대체하는 국내 생산은 발전을 위한 매력적인 장이 되었다. 수입의 제약 때문에 자본 절약적이며, 거의 고정된 실질 임금 하에서 노동력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공업화일 수밖에 없었다. 단기적으로 성장은 가능했고, 수익성도 있었다. 사실 이는 브라질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상적인 대응이었다. 수평적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발전은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920년대에 이미 생산성 증가가 최소한이었던 소비재 산업에서의 낙후 기술 영속화로 대공황이 향후 나타날 모순의 기초를 놓았을 수도 있다. 1950년대에 성장산업 분야에서의 점증하는 임금 압력 때문에 이들 전통 부문에서는 전과 같은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성공적 현대화로 이끌지도 못했고 낮은 성장률과 노동력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했다. 이 문제들은 부분적으로는 공업화가 이루어진 대공황 시기의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상황의 결과이다.”(Fishlow 1972, 41-2)

한편 까를도조와 헬위지의 대공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Cardoso and Helwege 1992, 51; 73-74; 91-93). 기본적으로 후르타도 명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정부의 커피농업에 대한 지지정책과 면화생산 장려가 케인지안 경지자극제로 작용하여 수출부문의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는 동안 헤알화의 평가절하가 제조업의 발전

에 발판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커피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가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하와 팽창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경기회복을 이끌었다고 본다. 그리고 수입대체공업화를 위한 정책들이 야기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수입대체공업화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또 1970년대 이전까지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다는 점에서 1930년대 시작된 수입대체공업화의 기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공황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이 공업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공황의 정치 사회적 충격 때문에 경험하게 된 정치변혁이 가져온 경제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변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 IV.6. 대공황과 바르가스<sup>8)</sup>

‘1930년 혁명’ 이후 사 반세기 동안 브라질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바르가스(Getulio Vargas)와 그의 유산을 빼놓고 20세기 후반 브라질 정치를 논할 수는 없다. 그의 집권이 ‘1930년 혁명’의 결과이고 ‘1930년 혁명’이 대공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방법으로는 입증될 수 없는 추론 수준의 논의라 할지라도 20세기 후반의 브라질 정치경제에까지 미친 대공황의 영향을 고찰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1930년 혁명으로 브라질 정치의 중심적 지도자로 부상한 바르가스는 15년 집권 후 직선 대통령으로 1950년 권좌에 복귀하나, 1954년 정치위기를 맞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생을 마친다. 그의 역할에 따라 그의 집권기는 상이한 성격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혁명정국의 조정자/중재자로서의 1930-37년, 신국가체제의 독재자로서의 1937-45년, 그리고 민주적 민중주의자로 변신한 1943-54년간이다.<sup>9)</sup>

8) 바르가스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강석영(1996, 129-40)과 김영철(2003, 55-83) 참조.

1930년 혁명의 완성은 1934년 7월 16일 新헌법 공포(간접선거)이다. 이로써 1890년대 이래 유지되어온 공화정체제의 종말을 고하고, 이전의 권력투쟁과는 구별되는 정치체제 근간의 변화를 맞게 된다. 이제 정치는 유럽과 같이 급진화되었고,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된 엘리트 집단들이 난립한다. 혁명파로는 이상적 자유주의자들의 PDSP, 민족주의적 근대화론자, 좌파 인민전선인 자유연합 ANL, 파시즘 운동의 브라질통합행동 AIB 등이 있고, 非혁명파로는 고급장교집단, 커피 대농장주, 舊정치 엘리트들이다. 바르가스는 이들 집단들 간의 조정자로서 정치기반을 확립한다. 조정자로서의 성공조건은 모든 이해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바르가스는 이해의 공통분모로부터 도출한 민족주의와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정치 아젠다로 제시한다. 섬유산업 보호목적으로 생산과잉 상태의 산업분야 기계수입을 금지하고, 노동조합법을 도입하고, 국가 개입적 정책으로 산업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바르가스는 1937년 10월 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1월 10일에는 의회를 해산한 후 新헌법을 공포하여 新국가 체제를 수립한다. ‘강력한 중앙정부, 브라질 영토의 정치적 통합, 국제무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브라질,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개선’ 등을 표방한 신체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시도되고 있던 국가조합주의 모델을 도입한 것이었다.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브라질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한다. 삼바를 브라질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카니발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킨다. 축구를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1938년 월드컵부터 브라질 축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9) 바르가스의 전 집권기간을 고전적 포퓰리즘의 시기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지만 (Castro and Ronci 1991, 153), 이는 소수 의견이다.

#### IV.7. 바르가스와 포폴리즘

1942년 8월 브라질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은 재민주화 요구의 계기로 작용하고, 이에 바르가스는 민주화와 직선제에 대비한 인기 영합적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하루 8시간 노동, 주간 휴일, 미성년과 여성에 대한 보호,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는 1943년 노동법의 입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 그것이다.

1945년 2월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발표하지만, 여론과 군부의 반대로 바르가스는 입후보를 포기한다. 그의 장기집권 종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기회를 맞은 정치인들은 집권을 위해 인기 영합적 정책의 남발 경쟁을 한다. 이 때부터 1964년까지 브라질 정치는 다당제를 유지한다. 내부자(De Dentro; 바르가스 신국가 체제와의 관계를 기준으로)들은 PSD와 PTB 등을 중심으로 모였고, 외부자(De Fora)들은 자유헌정주의자들의 UDN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을 결성했다.

신국가체제의 붕괴는 독재체제의 붕괴였지만 바르가스의 정치 은퇴는 아니었다. 그는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이상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적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다. 1950년 대통령 선거에서 산업화, 사회보장의 확대, 경제적 민족주의를 골자로 하는 노동주의(Trabalhismo) 공약을 내걸고 재집권에 성공한다. 집권 후 그는 산업화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정부 개입적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민족주의의 공약은 석유산업의 국유화로 실천한다. 그의 집권 2기는 국제수지 악화와 외국의 차관 중단에 따른 외환부족, 물가폭등과 같은 경제위기, 노동자와 대중의 정치적 집회, 군부의 간섭 증가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 위기와 혼란의 시기였고, 결과적으로 그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다.

그러니까 바르가스의 등장이 대공황의 산물이라면, 바르가스의 고전적 포폴리즘도 대공황의 산물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브라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포폴리즘적 경제정책, 즉 까르도소와 헬위

지(Cardoso and Helwege 1991, 1992)가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유형화한 정책들이 경제위기의 반복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이라면, 그리고 포퓰리즘의 재출현 확률이 그 이전의 포퓰리즘 경험의 빈도와 정책 실패의 강도의 함수라는 점(김우택 2004, 179-182), 더 나가서는 브라질 포퓰리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당제 정치제도 또한 바르가스 체제의 산물<sup>10)</sup>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1950년대와 1960년대 브라질의 경제만을 고려한 대공황의 장기적 평가는 불충분한 것일 수밖에 없다.

## V. 아르헨티나의 경험

### V.1. 1930년 이전

1929년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GDP는 4,367달러(1990년 달러)로 세계 10위를 자랑했다(Maddison 2003, 62-63; 88; 143). 이는 신대륙의 다른 식량생산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호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서유럽 12개국의 일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sup>11)</sup> 19세기 중

10) 1930년 이전 구공화국 하에서 전국적 정당을 만들려던 시도는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바르보사(Ruy Barbosa)가 세운 자유공화당(Partido Republicano Liberal)과 폰세카(Hermes da Fonseca)를 지원하기 위해 마샤도(Pinheiro Machado)가 만든 보수공화당(Partido Republicano Conservador)은 그 설립의도가 소멸되면서 단명으로 끝난다. 그 이전의 연방공화당(Partido Republicano Federal)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정당은 선거 때만 잠시 가동되는 제도였고, 아직 정당정치를 논할 단계가 아니었다(Carone 1970, 311-317). 그리고 바르가스는 신국가 체제(1937-1945) 하에서 페론의 정의당과 같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정당을 만들기 보다는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켰다. 1945년에는 민주화 이후의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두 개의 정당, 사회민주당(PSD)과 브라질노동당(PTB)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1946년 공화국 하에서의 새로운 정당들의 난립은 바르가스의 상황판단, 정치전략 등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그의 유산이다. 이 과정에서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브라질의 “연방제와 후원-수혜관계 구조의 독특한 효과”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11) 일인당 GDP 뿐 아니라 다른 통상, 사회지표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준다. 일인당 수출도 90달러로 세계 11위였으며, 자동차 보유는 인구 26명당 한 대로 영국보다 높았고, 문맹률 25%, 사망률은 인구 천 명당 13.1명, 전화가설 대수는

엽까지 아르헨티나와 이들 국가들 간에 존재하던 소득격차를 고려한다면 이는 그 이전 칠십여 년 간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이 다른 신태국 국가들이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29년경에는 농축산물수출 주도 성장이 지속되리라는 예상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외국자본과 도시 자본가들의 공업 분야에의 투자활동도 왕성하여서 수입 경쟁적 산업의 팽창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아르헨티나는 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16년 선거에서 수출농업에 기반을 둔 대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자유주의자들로부터 도시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급진시민연합(Unión Cívica Radical)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래 이들 간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급진당 정권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sup>12)</sup> 따라서 1929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자하는 사람들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었다. 세계무대에서도 번영의 미래를 약속 받은 나라로 알려졌고 국제정치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일차 상품 수출경제들과는 달리 온대작물 및 축산물 생산국으로서 세계 주요 생산국들과 주요 수입국들의 국내생산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었으며, 1920년대 후반에는 농축산물의 수출비중이 96%에 달해 결코 안정적이라 할 수 없는 세계 농산물시장의 여건에 따라 경제가 부침을 드러내곤 하는 ‘아르헨티나 경기주기’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밀(22%), 옥수수(19%), 아마인(12%), 쇠고기(11%), 모(8%), 피혁(8%) 등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세계시장에서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주요 공급자였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공급과잉 상황에서는 수출수입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취약성을 드러내곤 할 수 밖에 없었다(O’Connell 1984, 213).

281,000대 등이다.

12) “오늘날의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질서 잡힌 나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라는 1929년 한 영국 평자의 평가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정치상황에 대한 유럽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Díaz-Alejandro 1970, 58에서 재인용)

또 다른 위험은 1920년대의 번영에 가려져서 보이진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르헨티나의 근로자들,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자신들의 생산물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곡물생산자들 등 잠재적 폭발력을 가진 긴장이 일찍부터 축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30년 이전 아르헨티나의 대부분 도시근로자나 농촌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서유럽 노동자들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회 정치적 지위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였다.

## V.2. 대공황의 파급과 대응

이같은 배경 하에서, 1920년대 말, 주요 수출품목인 육류와 곡물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아르헨티나의 대공황은 선진국들에 비해 조금 먼저 시작되었다. 1928/29년 주요곡물 생산국들에서의 풍작이 기존의 넘쳐나는 재고에 더해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1928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9년 중반 또 다시 북반부에서의 풍작 뉴스가 전해지고, 밀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밀 가격은 일년 사이에 30%정도 하락한다.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28년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긴축으로 외국인들이 투자자본을 회수하면서 자본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국제수지 위기의 압력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1929년 9월 월스트리트 발 대공황의 충격은 곡물 육류가격의 급락이었고, 이에 따른 수출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뒤흔들었다. 12월 정부는 폐소화의 태환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O'Connell 1984, 194-195).

이제 국제수지 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었다. 1930년 중반 목축업자, 곡물생산자, 수출업자, 금융인들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이같은 분위기는 군부 지도부에 전달되었다. 우리부루(Uriburu)장군의 무혈쿠데타에 대한 급진당이나 정치권의 반발은 미미했고, 칠십 년 동안의 의회민주주의 전통이 무너졌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선거로

평가받는 1932년 선거에서 전통적인 목축업과 축산물 수출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의 후스또(Justo) 장군이 집권하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책은 육류수출과 그 주요시장인 영국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1933년 영국과 체결한 로카-런시맨(Roca-Runciman) 조약으로 아르헨티나는 영국 육류시장에서 쿼터를 보장받는 대신 아르헨티나는 채무성에 의해 동결되었던 영국투자자들의 이윤송금을 해제했다. 파운드 화 계정 동결 해제로 아르헨티나는 대내외 채무구조조정이 가능케 되었고, 평가절하와 농업에 대한 신용확대도 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는 이 같은 조치들로 단기간 내에 경제회복에 성공하였고, 1937년에는 수출도 완전 회복되었다. 따라서 대외채무 상환의무의 차질 없는 이행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종속적 상태의 지속이라는 대가를 치렀다는 비판도 받는다 (Marichal 1989, 211-214).

1930년 이전 아르헨티나가 누렸던 번영의 유산 중 하나가 대공황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금 보유고였다. 1928년 말 4억9천만 금 페소까지 늘어났던 금 보유고는 대공황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1935년 중앙은행 설립 당시 그 절반 정도인 2억 4천7백만 페소가 아직 남아 있었다.<sup>13)</sup>

### V.3. 아르헨티나 특유의 경험과 경제정책<sup>14)</sup>

아르헨티나의 대공황도 세계경제로부터 디플레이션 압력이 수입되었으며, 그 외부충격이 컸다는 점에서는 다른 일차산품 수출국들과 다르지 않다. 교역조건은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24%정도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대외부문의 대GDP 비중도 72%에서 56%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공황은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여

13) 1933년 이전 1 금 페소는 0.965 금 달러였다. 1933년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감안하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1935년 금 보유고는 4억 달러에 이르는 셈이다.

14) 이하는 della Paolera and Taylor(1998)를 주로 참조한 것임.

타 선진국들이나 이웃 나라들에 비해 그리 심하지 않았다. 1932년 바닥에서의 실질GNP는 1929년에 비해 14% 하락한 수준으로 미국의 30%, 멕시코 19%, 칠레 27%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다. 1935년에는 1929년 수준을 상회하기에 이른다. 수출도 1937년에는 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디플레이션도 6%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20%에 비해 매우 양호했다. 아르헨티나 대공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하지 않았고 그 회복도 빨랐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은 당연하다. 그래서 델라 빠올레라와 테일러는(della Paolera and Taylor, 1998) 경제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을 제기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대공황은 기본적으로 수출수입 감소로 야기된 외환/외채위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정책은 당연히 외환정책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정도가 공황의 강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이는 평가절하에는 거시경제의 제도(regime) 변화부분과 외환시장의 압력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의도한 능동적 평가절하이며, 후자는 화폐시장의 균형을 되찾는 수단으로 강요된 수동적 평가절하이다.

그들은 통화정책에 주목했다. 1899년 ‘태환법’제정으로 제도입된 금본위제도 하에서 페소화의 가치는 2.27로 고정되어 있었고, 명목통화량이 국내의 시장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되면서 당시 통화당국은 아무런 통제력도 갖지 못했다. 1929년 태환성은 포기되었으나 금본위제도 하의 통화정책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위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변화가 1931년에 발생했다. 1931년 3월까지 본원통화의 80%는 금 보유하고였고, 국내신용은 2억 9천3백만 페소로 삼십이 년 동안이나 동결되어 있었다. 1931년 4월 아르헨티나 당국은 디플레이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화량 감소를 중지시키기로 하고 통화정책의 기본을 금 보유하고 목표제에서 명목통화량 목표제로 바꾸었다. 본원통화와 금 보유하고 간의 고정비율이 깨졌고 화폐제도는 금본위에서 법정통화제로의 체제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1932년 본원통화에서 국내신용의 비중은 62%로 증가하기에 이른다.

통화제도 변화의 의미는 정통 금본위제도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한 새 제도장치가 세계경제의 과잉으로부터 국내경제를 차단시킬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는 케인스 효과보다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킨 먼델(Mundell) 효과<sup>15)</sup>의 채널을 통해서였다. 1914년 이전의 아르헨티나 성공이 자본 노동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으로 하는 19세기 말 세계화 질서의 결과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당시 상황에서, 그것도 중심부의 선진국에 앞서서 지배적 정통이론과 궤를 달리하는 극단적 정책변화를 채택하는 데는 엄청난 지적 기술적 장애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통화제도 이외의 정책에서는 정통이론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좋은 예가 재정정책이다.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통 재정정책을 고수했고, 이는 대공황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보수적 재정정책 입장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당시는 케인지안 혁명 이전으로 아직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때이다. 미국에서 뉴딜정책의 정부지출 확장으로 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선전되었으나, 1930년대 미국의 경기 부양적 재정적자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 주변부 국가들에게는 선택 가능한 정책은 아니었다. 대형 지출 프로그램을 수행 관리할 정부구조도 조세제도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930년 대공황의 파급으로 대외거래가 급감하면서 관세수입이 줄어들어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관세율을 인상하고, 1932년에는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적어도 1935년까지, 재정정책 분야의 조치들의 순 효과는 긴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기회복의 원천은, 브라질과는 달리

15) 먼델 효과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통해 작용하는 디플레이션의 동태적 효과를 지칭한다. 만일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어 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사람들은 구매를 뒤로 미룰 것이고, 명목고정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것도 꺼릴 것이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불황의 원인이 된다.

다른 데서 찾아야 하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금본위제도의 포기과 통화제도의 변화이다.

#### V.4. 1930년대에 대한 평가와 보수주의 세력 회복의 의미

아르헨티나의 경험으로는 대공황이 재앙이었나 아니면 행운이었나? 1933년 재무장관에 취임한 페데리코 피네도(Federico Pinedo)에 의해 추진된 수입대체공업화는 제조업의 급성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와 도시화라는 결과도 가져다주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대공황에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도시 엘리트 계층의 점진적 부상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도시와 농촌, 해안과 내륙, 부자와 빈자라는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축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수출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권력도 행사하던 전통과두세력들은 1916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양도했던 정치권력을 대공황을 계기로 되찾아갔고, 이들과 결탁한 군부는 향후 오십여 년 간 지속될 정치개입을 시작한다. 이제 그들은 불신 받는 자유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 질서를 모색해야만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1860년부터 1930년에 이르는 경제변영기 동안 축적된 긴장과 마찰이 1930년대에 정치적 반동, 수출과 농업의 부진, 산업화-도시화의 압력 등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1930년 이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간주되던 무역과 외국자본이 대공황 동안 아르헨티나에게 실망과 굴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대외 개방과 외국자본에 적대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줄 아는 포퓰리스트 선동정치인의 출현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되었다.

#### V.5. 대공황의 지연된 반응과 페론의 포퓰리즘(1946-55)

1930년대 말 다시 변영기를 맞은 듯 보이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1940년 봄 독일이 프랑스에서 스칸디나비아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을 점령하고 해상을 통한 대륙에의 접근이 봉쇄되면서, 아르헨티나는 서유럽 거의 모든 곡물시장을 잃게 되고 또 다른 경제위기에 봉착한다.

흔히들 제2차 세계대전이 아르헨티나의 공업화와 경제성장에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고 믿으나, 이는 진실의 일면일 뿐이다. 전쟁이 제조업에 대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보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품의 새로운 수출시장도 열어준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화에 필수적인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도 어려워졌고, 아르헨티나의 중립선언으로 핵심 수입품의 조달은 더욱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박들이 전쟁에 동원된 여건에서 곡물과 같이 부피가 큰 수출품목들은 운반 수단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과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나타났다. 대공황의 회복기인 1933년부터 1939년까지 6년 동안에 제조업 생산이 43% 증가한 반면, 1939년부터 1945년간에는 23% 증가에 그쳤다. 실질GDP도 1933-39년간의 27% 증가에 비해 1939-45년간에는 13%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고정자본형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극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Díaz-Alejandro 1970, 103).

아르헨티나의 공업화를 1930년대가 아닌 세계대전과 페론정권과 연관짓는 상식은 아마도 1930-43정부의 선거부정과 부패, 비민주적 관행 등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 때문인 듯 하다. 사실 1930년대 정권들의 경제팀은 매우 유능했고, 그들의 경제정책은 성공적이었다. 대공황으로부터의 빠른 경제회복과 공업화가 그 증거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새로운 시련은 아르헨티나에게 경제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 사회적 과제를 노정시켰다. 이는 1930년 쿠데타 이래 심화되어온 지배계층과 군 지도부 내의 이념적 균열이 전쟁에서의 아르헨티나의 외교노선 선택을 둘러싸고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친나치독일 감정이 강했고, 아르헨티나는 전쟁에서의 중립을 선언한다. 미주 국가들이 주축국들과 단교

하기를 원하던 미국과의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43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자, 과두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우려한 연합장교단의 쿠데타로 보수 전통세력은 실권하게 된다. 연합장교단 내에서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한 페론은 1946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승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아르헨티나에게 유리한 시장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대공황기에는 불가능했던 수출에 근거한 경제성장모델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농축산물의 수출 뿐 아니라 그간 키워놓은 제조업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출에 기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이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공황 시기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1930년 이전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불신감과 외국자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피네도 계획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도시부문의 고용창출을 위해 공공서비스와 같은 비교역제 생산증가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펼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전후 아르헨티나가 선택한 대내 지향적 발전전략은 역사적 뿌리가 깊은 ‘대공황의 지연된 반응’이라 할 수 있다(Díaz-Alejandro 1970, 109).

이같은 아르헨티나의 선택은 1946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페론의 득표 전략과 관련이 있다. 그는 사회정의, 경제적 독립, 정치적 주권이라는 삼 원칙을 내세워 선거에 승리 할 수 있었다. 사회정의는 정치운동에 명분을 제공하고, 기득권층의 대항세력을 결집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는 매우 유용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그 비용은 매우 크다. 지지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제도화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정부지출구조를 고착시켜 재정적자와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만성화한다. 실제로 페론정권의 인기 연합적 정책들은 예산제약을 무시한 채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대내 대외적 불균형이 경제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된 상황에서 아르헨티

나가 헤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페론주의의 두 번째 축인 경제적 독립을 위해 국가채무를 일거에 상환했고, 철도, 전기 등과 같은 외국인 소유의 기간산업을 매입해 국유화했으며, 30년대부터 추진되어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수입대체공업화를 고집했다. 그간 축적해 놓은 부가 있었기에 채무상환과 국유화 기업들의 매입은 가능했지만, 전쟁피해 복구사업으로 맞이한 유럽과 일차산품 수출국들(미국을 제외한)의 전후 호황에 편승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페론주의의 세 번째 축인 정치적 주권을 과시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제3의 입장'을 표방하였고 이는 미국의 견제를 유발해 결과적으로는 해외수출시장의 상실로 이어졌다. 식민지 시대부터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적 독립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소득의 하락을 예약한 셈이다. 페론은 1970년대 재집권기에 스스로 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포퓰리즘에 근거한 민족주의 운동이 '민족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환상이었음을 몸소 확인한 셈이다(김우택 2004; 박구병 2003).

## VI. 양국경험의 비교와 시사점

1930년대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대공황이 남미의 두 경제대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게는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대공황의 중·단기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나라 경험의 유사성과 차이를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공황 이전 두 나라는 일차산품을 수출하고 그 이외 대부분의 필요를 수입으로 충당하는, 즉 국제 자유무역 질서하의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존성도 큰 경제라는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브라질이 커피 단작에 의존성이 큰 열대-아열

대작물 수출 중소득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온대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고소득국으로, 1929년 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대 4 정도의 큰 격차를 보였다.

정치적으로도 두 나라는 오랜 기간동안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정권교체를 해온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면에서나, 그 안정이 표면적인 것일 뿐이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했다. 브라질에서는 1889년 공화주의 혁명으로 왕정을 종식시킨 이후 상파울로 주와 미나스 제라이스 주 간의 담합을 통해 수출농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두지배 엘리트의 권력 독점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프로레타리아 계층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1920년대 경에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중적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있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대공황이 '1930년 혁명'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출농업 부문 엘리트들의 과두 지배체제는 일찍이 1916년에 도시중산층에 지지기반을 둔 개혁세력인 급진당으로 넘어갔고, 양대 세력 간의 긴장관계가 유지되고는 있었으나 정치는 안정된 듯 보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대공황이라는 충격으로 곧 드러났다. 경제적 충격은 곧 정치적 파국으로 치달아 군부 쿠데타로 전통적인 수출농업 부문의 과두 지배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1930년대 대공황의 파급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양국의 경험의 유사성과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차산품 수출경제인 양국에 교역조건 악화와 외국자본의 유출이라는 대외부문의 쇼크로 야기된 대공황이 비민주적 방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로 이어졌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과 기존의 수출농업을 대체하는 수입대체공업화였다는 점에서는 두 나라의 경험이 유사하다. 양국에서 새 집권 세력의 지지기반과 이념성향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향후 정치 사회적 전개과정 뿐 아니라 경제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경제정책은 외부여건의 제약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도 제한적이었다. 커피 수출국으로서의 브라질과 온대 농축산물 수출국으로서의 아르헨티나의 경제특성의 차이 때문에, 브라

질은 커피농업부문의 소득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 책으로 케인지안 재정정책을 선택했다면, 아르헨티나는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먼델리안 효과를 염두에 둔 통화제도의 변화를 선택했던 것이다. 선진국 발 대공황의 파급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경제정책은 달랐어도, 양국의 불황은 선진국들이나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완만했으며 불황으로부터의 회복도 비교적 빨랐다는 경험도 공유한다.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 혁명’을 성공시킨 브라질에서는 혁명초기 급진화되고, 이념에 따라 파편화 되었던 엘리트 집단들이 점차 바르가스를 중심으로 정치연합을 형성하고 권위적 세력화하면서, 급기야는 국가조합주의 모델을 근간으로 삼은 신국가 체제를 수립하여 바르가스의 독재시대를 연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럽 파시즘 스타일의 극우 보수주의자인 우리부루 장군이 처음 집권하였다가 1932년 선거에서 보다 온건하고 타협적인 후스또 장군에게 세력이 넘어가지만, 그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고 1930년대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권력은 부패했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에 취약했다. 그러니까 집권세력의 이념성향과 지지기반,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치전개 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긴장 - 아르헨티나에서는 개혁에 대한 열망, 브라질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 이 축적되고 있었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잠재하고 있던 이 문제들을 노출시켰고, 아르헨티나에서는 1943년 연합장교단의 쿠데타로, 브라질에서는 신국가체제의 붕괴로 진전되었지만, 궁극적 귀결은 민족주의 정서를 구심점으로 삼은 포퓰리즘이라는 점에서는 양국의 경험이 동일하다.

## VII. 맺음말

1930년대는 라틴 아메리카 발전에서 중대한 전환기였다. 1929년을 분기점으로 수출주도 성장의 시대에서 수입 대체적 공업화의 시기로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목표를 위해 공공 정책이 동원되는 시기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대공황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 경제사의 대부분은 국제 수지의 조정과 국내 경제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노력 중심으로 씌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대공황=재앙’이라는 등식을 무의식중에 당연시하면서, 선진국에서의 대공황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공황의 성격차이를 간과해왔다. 더 나가서는 대공황이라는 외부충격이 교역의 위축과 자본이동의 중단이라는 경로를 통해 야기된 외환부족사태였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대외채무위기였다는 점,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고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다른 대외채무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도 소홀했었다. 그렇다 보니 “대공황은 특별한 대외채무위기였나? 특별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인가?”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지 못했다.

본고는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대공황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던 중단기 경제효과의 분석을 넘어서는 대공황의 장기적 영향, 즉 정치 경제제도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장기적 경제효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통계분석과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명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지난 75년 간의 두 나라 경제성장의 차이는 무엇을 말해주나? 1929년 사대 일의 일인당 소득의 격차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비슷하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하는 질문은 당연한 것이고, 그 원인을 대공황의 경험에서부터 찾은 것이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경제적 포퓰리즘의 원인이 체제의 내생변수인 정치제도에 있음과 그러한 정치제도를 만들어낸 과거의 고전적 포퓰리즘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시한 바 있다(2004, 179-182).

아르헨티나 경제의 실패 원인이 정치적 불안에 있다면, 그 원인은 군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페론주의로 양분

된 상호배제적 정치집단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악순환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같은 정치구조가 페론의 고전적 포퓰리즘의 유산이고 그것은 대공황의 지연된 결과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도 대공황-권위주의 체제-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다르지 않다. 다만 바르가스 체제의 정치적 유산이 다당제라는 점에서 상호배제적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극한투쟁을 계속하게 만든 페론의 유산과는 다르며, 이 차이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의 경제정책 선택과 그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었다.<sup>16)</sup>

이제 다시 III장의 질문 “대공황은 재앙이었나, 아니면 행운이었나?”로 되돌아간다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단기적 충격은 분명 재앙이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수입대체적 공업화를 통해 견실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에서 행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포퓰리즘과 정치제도들이 그 이후 두 나라에서 반복된 무책임한 경제정책들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6) 지난 반세기 동안의 양국의 경제성과의 차이를 바르가스나 페론의 상이한 정치 유산에서 찾고 또 그들의 포퓰리즘의 뿌리를 대공황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혹자는 대공황에 대응하여 양국이 선택했던 상이한 경제정책 - 브라질의 재정정책과 아르헨티나의 통화정책 - 과 양국의 경제성과의 차이 간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특정 상황 하에서 선택했던 상이한 경제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다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차이가 정책결정 메커니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제도로 고착되거나 아니면 정책의 결과가 연쇄적으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브라질이 채택했던 케인지안 재정정책과 아르헨티나가 선택했던 금본위제도의 포기나 경기주기에 대응한 유연한 통화정책은 그 후 경제학 이론의 발전과 함께 주류 경제학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인정되면서 양국 공히 사용하는 경제정책들이 되었던 것이다.

&lt;표 1&gt; 브라질의 주요 경제지표

	실질 GNP 1939 Cr\$ 백만	명목 GNP Cr\$ 백만	실질 소득 1939 Cr\$ 백만	실질 소득 지수	환율 Cr\$/£	물가지수 1929=100	통화량(M1) Cr\$ 천
1919					16.678	71.7	2,373
1920	21.6	15.0	22.3	61.8	16.623	74.3	2,351
1921	22.3	14.4	22.3	61.8	28.981	69.1	3,339
1922	23.0	14.0	24.8	68.7	33.484	65.3	4,094
1923	24.3	18.7	27.6	76.5	44.652	83.1	4,579
1924	24.1	23.4	29.3	81.2	40.421	103.7	4,998
1925	23.6	24.5	29.0	80.3	39.385	110.9	4,415
1926	24.2	21.9	29.3	81.2	33.611	96.9	4,531
1927	26.3	23.3	30.7	85.0	41.070	94.8	5,182
1928	30.6	28.6	36.1	100.0	40.743	99.9	5,909
1929	30.5	28.5	36.1	100.0	41.015	100.0	5,575
1930	30.3	24.5	33.1	91.7	44.329	86.6	4,754
1931	29.4	21.7	32.2	89.2	62.951	79.1	5,518
1932	31.0	22.4	33.6	93.0	48.531	77.1	6,523
1933	34.2	24.1	36.4	100.8	53.149	75.4	6,307
1934	36.5	26.1	39.2	108.6	73.423	76.4	7,231
1935	37.1	27.0	38.1	105.5	85.112	77.9	7,622
1936	41.2	36.1	42.3	117.2	86.230	93.8	8,504
1937	42.2	43.4	43.5	120.5	78.788	109.9	9,478
1938	44.2	45.2	44.1	122.2	86.387	109.4	11,902
1939	45.6	45.6	45.6	126.3	85.746	107.1	11,233

자료: Villela, Annibal V. e Wilson Suzigan(1973), Apêndice Estatístico로부터 재구성.

<표 2> 브라질의 교역 관련 자료

	수출 £ 1,000	수입 £ 1,000	무역수지	교역조건 지수	수출의 구매력 지수	수출/GNP	커피수출/ 총수출
1919	117,388	71,867	45,521	59.5	54.1		56.0
1920	82,346	88,369	-6,023	44.1	36.3	11.7	49.0
1921	45,411	46,033	-622	36.7	30.2	11.9	59.8
1922	61,317	43,609	17,708	58.7	51.9	16.7	64.6
1923	68,562	47,441	21,151	74.3	72.1	17.6	64.6
1924	86,737	62,502	24,235	104.3	91.6	16.5	75.7
1925	102,875	84,443	18,432	107.9	93.2	16.4	75.2
1926	94,254	79,876	14,378	104.9	89.7	14.6	73.8
1927	88,689	79,634	9,055	88.8	84.3	15.6	70.6
1928	97,426	90,669	6,757	101.9	96.9	13.9	71.5
1929	94,831	86,653	8,178	100.0	100.0	13.5	71.0
1930	65,746	53,619	12,127	66.3	70.3	11.9	62.9
1931	49,544	28,756	20,788	62.9	74.6	15.7	69.1
1932	36,630	21,744	14,886	68.1	62.8	11.3	71.9
1933	35,790	28,132	7,658	57.7	66.8	11.7	72.8
1934	35,240	25,467	9,773	61.2	76.5	13.3	61.1
1935	33,012	27,431	5,581	44.3	58.9	14.9	53.7
1936	39,069	30,066	9,003	44.6	65.9	13.6	45.6
1937	42,530	40,608	1,922	45.8	65.7	11.7	42.4
1938	35,945	35,916	29	41.5	72.8	13.5	37.7
1939	37,298	31,801	5,497	35.7	66.7	12.3	39.8

자료: Villela, Annibal V. e Wilson Suzigan(1973), Apêndice Estatístico로부터 재구성.

&lt;표 3&gt; 브라질의 재정 관련 자료

	연방정부 수입 Cr\$1,000	연방정부지 출Cr\$1,000	재정수지	연방, 지방정부 총지출 Cr\$1,000	연방, 지방정부 재정적자 Cr\$1,000	정부지출/G NP (%)	재정적자/G NP (%)
1919	625.7	931.6	-305.9	1,485.2	-342.5		
1920	822.3	1,226.7	-304.5	1,872.0	-323.9	12.5	2.2
1921	891.0	1,285.7	-394.7	1,979.5	-443.5	13.8	3.1
1922	972.2	1,428.3	-456.1	2,217.9	-544.8	15.8	3.9
1923	1,258.1	1,405.1	-147.0	2,427.3	-249.8	13.0	1.3
1924	1,511.1	1,629.8	-118.7	2,752.6	-139.0	11.8	0.6
1925	1,734.5	1,756.8	-22.3	2,910.2	-63.8	11.9	0.3
1926	1,644.6	1,823.6	-178.9	3,411.9	-412.4	14.6	1.8
1927	1,999.5	2,008.7	-9.2	3,971.7	-307.4	13.9	1.1
1928	2,207.4	2,018.2	189.2	3,842.1	-49.4	13.5	0.2
1929	2,394.7	2,224.6	170.1	4,503.9	-174.9	15.0	0.6
1930	1,674.4	2,510.5	-836.2	4,684.2	-1,349.1	19.1	5.5
1931	1,750.2	2,046.6	-296.4	4,201.8	-638.1	19.4	2.9
1932	1,695.6	2,859.7	-1,164.1	4,694.3	-1,385.4	21.0	6.2
1933	2,055.3	2,391.8	-336.6	4,364.7	-451.3	18.1	1.9
1934	2,518.6	3,050.2	-531.6	5,374.6	-793.5	20.6	3.0
1935	2,722.7	2,872.0	-149.3	5,404.2	-124.5	20.0	0.5
1936	3,127.5	3,226.1	-98.6	6,066.6	23.9	16.8	-0.1
1937	3,172.5	4,144.0	-971.5	7,275.2	-968.3	16.8	2.2
1938	3,879.8	4,735.4	-855.7	8,113.8	-764.9	18.0	1.7
1939	4,297.6	4,850.3	-552.8	8,747.4	-385.9	19.2	0.9

자료: Villela, Annibal V. e Wilson Suzigan(1973), Apêndice Estatístico로부터 재구성.

<표 4>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1913년 페소)

	실질GNP (Y)	민간소비 (C)	정부지출 (G)	투자 (I)	수출 (X)	수입 (M)	재정적자/ GDP(%)
1913	4,640	4,322	204	579	1,805	2,270	0.8
1928	7,780	6,549	406	900	2,901	2,991	1.7
1929	8,146	6,781	425	1,029	2,848	3,048	2.3
1930	7,784	6,829	408	871	2,100	2,533	4.3
1931	7,216	5,248	393	533	2,871	1,651	2.7
1932	6,966	5,092	393	374	2,636	1,282	1.8
1933	7,309	5,723	415	418	2,474	1,506	1.7
1934	7,912	6,085	447	554	2,546	1,584	1.8
1935	8,275	6,187	538	691	2,754	1,836	1.2
1936	8,336	6,249	565	824	2,491	1,870	1.7
1937	8,964	7,145	612	748	2,911	2,381	2.4
1938	8,979	7,703	634	824	1,963	2,251	2.4
1939	9,337	7,271	668	691	2,501	1,755	3.6
1940	9,486	7,588	672	637	2,071	1,461	2.7

자료: della Paolera, Gerardo and Alan M. Taylor(1998)의 Table 1(b).

&lt;표 5&gt; 아르헨티나의 통화 지표

	본원통화 백만 1913년 페소			총유동성(M3) 백만 1913년 페소	할인율(%)
	M0	금 보유고	국내 신용		
1913	823	530	293	1,687	5.4
1928	1,406	1,113	293	4,717	6.3
1929	1,247	954	293	4,652	6.9
1930	1,261	968	293	4,660	6.9
1931	1,245	593	652	4,149	7.2
1932	1,339	584	755	4,116	7.1
1933	1,214	561	653	4,061	6.1
1934	1,172	561	610	4,078	5.5
1935	1,647	1,354	293	4,180	5.4
1936	1,685	1,528	157	4,611	5.6
1937	1,679	1,422	257	4,922	5.2
1938	1,615	1,296	319	4,811	5.3
1939	1,796	1,396	400	4,960	5.8
1940	1,810	1,329	481	5,050	5.8

주: 1935년 이후 금 보유고는 1금 페소 당 2.27에서 4.96 지폐 페소로 절하된 공식 기준가로 평가한 것이고, 국내신용은 본원통화에서 절상된 금 평가액과 지불 준비금을 뺀 것임.

자료: della Paolera, Gerardo and Alan M. Taylor(1998)의 Table 1(a),(b).

<표 6> 아르헨티나의 가격지표

	일반가격지수 1913=100	임금수준 1913=100	토지가격 1913=100	환율 페소/\$	실질환율 1913=100	교역조건 1913=100
1913	100	100	100	2.35	100	100
1928	131	180	296	2.32	121	99
1929	127	178	293	2.35	126	90
1930	122	166	238	2.70	144	88
1931	118	155	260	3.40	165	65
1932	119	146	237	3.83	162	68
1933	114	139	210	3.18	139	64
1934	130	136	196	3.89	159	79
1935	128	147	185	3.75	153	79
1936	131	153	217	3.55	148	96
1937	150	159	252	3.28	121	110
1938	140	160	271	3.86	151	101
1939	143	166	256	4.27	162	89
1940	163	176	248	4.30	145	91

자료: della Paolera, Gerardo and Alan M. Taylor(1998)의 Table 1(a),(b).

## &lt;부록&gt;

## 후르파도 명제의 쟁점들

후르파도는 브라질 정부의 커피농업 지원정책을 케인지안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식한 최초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커피 부문의 보호를 위해 수행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그 재분배 효과가 1930년대 브라질의 소득수준을 유지시켜주었으며, 이 수출농업으로부터 공업부문의로의 자원 재배분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공업부문의 투자기회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바로 그 정부정책이 다름 아닌 케인지안 경기부양 재정정책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벨라에즈(Peláez 1972)는 커피지원 정책이 브라질 경제의 소득수준 유지에 유효한 정책이었는지 또 ‘케인스 이전의 케인지안’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재정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후르파도 명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1930년대 경제의 소득수준 유지가 재정정책과 재분배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커피가격 지지를 위해 사용된 자금흐름을 검토한 후, 벨라에즈는 “새로운 세금으로 충당된 정부지출의 증가는 케인지안 재정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짓는다. 1933년까지 “수매와 재고의 폐기는 기본적으로 새로 도입된 수출세로 충당되었고,” 1934년 이후에는 “희생 쿼터”로 명명된 일종의 현물세로 대체되어 수매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의 필요조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벨라에즈의 두 번째 논거는 당시 정부는 정통경제정책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긴축기조였고 커피 지지프로그램을 위해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을 통해 제공한 신용도 다른 부분의 신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였었고 따라서 순 신용창출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당시 재무장관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다. “외국차관도 악성 통화팽창도 없었다. 커피의 수매, 잉여 재고의 폐기와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에만 사용될 수출세를 신

설한 것이 사실이다. 커피 지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Peláez 1972, 59-60).” 즉, 커피 지지를 위해 화폐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는 말이다. 당시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대외채무의 상환 및 재조정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재정 균형과 금융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채권은행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이 의견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벨라에즈는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이 커피 지지를 위한 화폐발행에 힘입은 바 크다는 후르타도 명제는 역사적 사실의 중대한 왜곡에 근거하고 있다(1972, 61)”고 단언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균형예산은 정부가 원하는 바였고 재정균형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벨라에즈의 주장이다. 재무장관 소우자 코스타(Souza Costa)는 “균형예산은 재정에 관한 논란의 여지없는 원칙이었고 환경이 허락하는 한 적자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1972, 91).”라고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후르타도는 브라질 경제가 연방정부의 적지 않은 재정적자에 힘입어 1930년대에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여기 소개된 사실의 분석은 이 가정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1932년의 적자 - 일종의 케인지안 보상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 는 빠울리스타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발생한 단 한번의 적자였다. 대공황의 결정적 시기 동안 바르가스 정부는 사려 깊은 균형예산 정책을 따랐다”는 것이 벨라에즈의 입장이다(1972, 92).

‘커피 지지의 미시경제학’이라 부른 분석에서 벨라에즈는 또 하나의 후르타도 명제에 대한 비판 논거를 제시한다. 최적관세 정리(Mill-Bickerdike Theorem)와 수입세와 수출세간의 대칭성을 보인 러너정리(Lerner Theorem)를 사용하여 수출세가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커피의 최저가격 고정으로 커피부문에 유리하게 상대가격이 왜곡됨에 주목했다. 그리고는 델핑 네또(Delfim Netto 1959)를 상기시키면서, 커피지지프로그램은 인위적으로 상대수익률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공업화에도 장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브라질의 경우와 같이 수십 년에 걸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지속은 불가피하게 비효율적 자원배분 상태를 초래하고 외부로부터의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된다. 커피 최저가격 책정에 따른 왜곡된 자원배분은 국내 산업발전과 경제활동 다양화를 저해할 수 있다. 대외경쟁의 심화는 최저가격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나가서는 커피 생산의 비교우위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후르따도가 한 것처럼 바르가스 정부의 교역상의 어려움을 그 이전의 커피지지 프로그램을 무시한 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만일 브라질이 일련의 산업활동에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었다라도, 커피지지 프로그램은 산업화를 해쳤다.”(1972, 106)

그러면 브라질에서의 대공황의 충격이 크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후르따도 명제를 대신할 뻔라에즈의 설명은 무엇인가? 그는 1931/2년의 무역수지 흑자와 1932년의 의도하지 않았던 정부지출 증가를 꼽는다. “1931년의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는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감소의 결과로 야기되었을 수도 있는 실질 생산의 하락이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 1932년에는 무역수지 흑자와 정부적자(주로 빠울리스타 혁명의 군사적 지출로 발생함)가 경제의 회복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1968, 34)

비렐라와 수지강(Villela e Suzigan 1973)은 1930년대 브라질 경제의 변화에 관한 상세한 사실적 기초를 제공한다. 공들여 모은 자료들에 근거한 이들의 견해는 뻔라에즈에 근접한다. 커피 부문 보호정책이 경제의 소득수준 유지에 크게 기여한 케인지안 정책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뻔라에즈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커피 지원프로그램이 공업화에 장애가 되었다는 뻔라에즈의 주장에는 유보적이다. 커피 보호정책이 성장과 브라질 경제의 다양화에 제약요인이 되었는데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45년까지 통화, 외환, 재정정책들이 성장과 경제활동의 다양화를 제약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휘실로우(Fishlow 1972)는 이 논쟁과 관련하여 “커피정책이 아마도 후르따도가 주장하듯이 대공황 조기 회복에 그렇게 핵심적이지도 또 그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고 뻔라에즈가 결론 내렸듯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도 아니었을 것(1972,

29)”이라는 양비론을 피력하였다. 벨라에즈에 대한 그의 비판은 초기 커피보호 정책의 소요 재원의 삼분의 이가 수출세로 충당되었다는 그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나머지 삼분의 일의 커피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역할, 즉 1930년도에 도입된 외자와 정부 지원금의 승수효과를 무시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브라질의 세계시장 지배력과 커피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에 수출세의 부담이 커피생산자보다는 외국인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벨라에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세가 커피 부문 내에서의 재원충당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휘실로우는 브라질에서 대공황의 충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무역수지 흑자와 1932년의 재정적자를 꼽는 벨라에즈에 동의한다. 하지만 “위기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연방정부는 점점 더 케인 지안 스타일을 따르는 듯이 행동”했고, 이것이 1930년대 국민소득의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외부문의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 1932년 이후의 GNP 급성장의 추동력이 국내수요라는 것은 명백한데, 벨라에즈는 그의 대공황 연구에서 커피정책에 관한 후르따도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느라 때로는 이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였다(1972, 27)”고 아쉬워한다.

실베르(Silber 1973)는 후르따도 명제를 둘러싼 논쟁의 쟁점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벨라에즈가 제기한 이슈들에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며, 후르따도의 분석이 기본적으로 옳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대공황의 반향이 크지 않고 브라질 경제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 커피보호정책의 소득수준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후르따도가 옳은 통찰력을 가졌던 것 같다. 하지만 대공황의 충격을 완화하고 1932년 이후의 생산수준의 회복을 가능케 한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무시함으로써 그의 작업은 역사적 연구로서 실패이다.”(1973, 57-58) 즉, 벨라에즈, 비렐라와 수지강, 휘실로우 등 모든 다른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위기 초기 국면에서의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와 1932년의 의도하지 않았던 재정적자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커피 보호정책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커피 구매자금을 신용팽창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도 완전히 옳은 것이 아니었다.

뵐라에즈의 분석에 대해 실베르는 휘실로우가 제기한 문제점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문제로 꼽았다. 첫째, 커피 구매자금의 대부분이 커피 수출세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은 임의적 기간선택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분석기간을 1931년 5월에서 1933년 2월로 잡으면 수출세의 비중이 65%로 높으나 여기에 1933년과 1934년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48%로 낮아진다. 둘째로는 뵐라에즈는 수출부문의 명목소득 유지에 도움이 된 환율의 평가절하와 커피 지지프로그램이 더 이상의 교역조건 악화를 막았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것이고, 셋째, 1930년대의 통화-재정정책을 “정통(orthodox)”으로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식 문서에 표출된 정책당국자들의 의도가 당시 경제현실의 제약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그 의도만으로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베르에 따르면 1930년대 브라질의 통화-재정정책은 전혀 정통이 아니었다. 10년 간 통화는 배로 팽창되었고, 정부재정은 적자기조였다. 끝으로, 커피가격 지지정책에 따른 산업간 상대수익률의 왜곡으로 1930년대 공업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뵐라에즈의 주장에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1930년대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커피부문 방어에 따른 총수요의 유지가 제조업 부문의 투자유인이 되었고, 그것이 커피 부문 자체의 투자기회보다도 큰 유인이었다는 것이다. 또 그래야만 1930년대의 산업생산 증가가 설명된다.

#### Abstract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was a watershed in Latin American development. The crash of 1929 ended the era of export-led prosperity and opened a new decade of import 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ISI) i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However, the Latin American crisis was not the same kind that the advanced Northern

Hemisphere countries experienced since it was an external debt crisis caused by external shocks rather than endogenously created one. Then what does make the 1930 Latin American debt crisis unique and special?

This paper focuses on the long-term effect of the great depression that worked indirectly through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Restricting our analysis to Argentine and Brazilian cases, we explore how the immediate impact of external shocks led to political turmoil and financial collapse and these, in turn, brought the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 Specifically, these medium term effects were the ISI and the rise of populist government. And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burden of this political legacy when we evaluate the long-term effect of the great depression.

Key Words: Great Depression, Brazil-Argentina, Industrialization, Political Legacy, Populism/대공황, 브라질-아르헨티나, 공업화, 정치적 유산, 포퓰리즘

논문투고일자: 2007. 01. 15

심사완료일자: 2007. 02. 21

게재확정일자: 2007. 02. 21

## 참고문헌

-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史』, 하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영철(2003), “브라질의 정치 실험가, 제풀리우 바르가스,”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와 리더십: 페론에서 산디노까지』(이베로아메리카 연구총서 3),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우택(2004),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포퓰리즘: 정치경제학적 접근”, 철학연구회 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철학연구, 제64집의 별책), 철학과 현실사.
- 박구병(2003), “아르헨티나의 풍운아, 후안 도밍고 페론,”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와 리더십: 페론에서 산디노까지』(이베로아메리카 연구총서 3),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Baer, Werner(1979), *The Brazilian Economy: Its Growth and Development*, Columbus, Ohio: Grid Publishing.
- Bresser Pereira, I. C.(1972), *Desenvolvimento e Crise no Brasil*, 3a. Ed, São Paulo: Editora Brasiliense.
- Cardoso, Eliana A. and Ann Helwege(1991), “Populism, Profligacy, and Redistribution”, in Dornbusch and Edwards(eds.), pp.45-74.
- \_\_\_\_\_ (1992), *Latin America's Economy: diversity, trends, and conflict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Carone, Edgard(1970), *A República Velha: Instituições e Classes Sociais*, São Paulo: Difusão Européia do Livro.
- Castro, Paulo Rabello de and Marcio Ronci(1991), “Sixty Years of Populism in Brazil”, in Dornbusch and Edwards(eds.), pp.151-173.
- Conceição Tavares, Maria da(1972), *Da Substituição de Importações ao Capitalismo Financeiro: Ensaio sobre Economia Brasileira*, Rio de Janeiro: Zahar Editores.
- Delfim Netto, Antônio(1959), *O Problema do Café no Brasil*, FEA/USP.
- della Paolera, Gerardo and Alan M. Taylor(1998), *Economic Recovery*

*from the Argentine Great Depression: Institutions, Expectations and the Change of Macroeconomic Regime*, NBER Working Paper 6767, October 1998.

- Díaz-Alejandro, Carlos F.(1970), *Essays on the Economic History of the Argentine Republic*,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82), “Latin America in Depression, 1929-39”, in M. Gersovitz et.al.(eds.), *The Theory and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George Allen & Unwin.
- \_\_\_\_\_ (1983), “Stories of the 1930s for the 1980s”, in P. Aspe Armella, R. Dornbusch and M. Obstfeld(eds.), *Financial Policies and the World Capital Market: The Problem of Latin American Count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4), “Latin America in the 1930s”, in R. Thorp.
- Dornbusch, Rudiger and Sebastian Edwards(eds.)(1991), *The Macroeconomics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ichengreen, Barry(1996), *Globalizing Capital: A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shlow, Albert(1972), “Origens e consequências da substituição de importações no Brasil”, *Estudos Econômicos* 2(6), dezembro.
- Frank, Andre G.(1969),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R Modern Reader.
- Friedman, Milton and Anna J. Schwartz(1963),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NBER Studies in Business Cycl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Furtado, Celso(1959), *Formação Econômica do Brasil*, 11a. Ed., São Paulo: Companhia Editora Nacional, 1971.
- Hirschman, Albert O.(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Kafka, Alexander(1961),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Latin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in H.S. Ellis(ed.), *Economic Development for Latin America*, London: Macmillan.
- Maddison, Angus(2003),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Development Centre of the OECD.
- Marchial, Carlos (1989), *A Century of Debt Crises in Latin Americ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Connell, Arturo(1984), "Argentina into the Depression: Problems of an Open Economy," in Rosemary Thorp.
- Ortiz, J. (1993), *Essays on the Early History of Latin American Central Bank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Peláez, Carlos M.(1968), "A Balança Comercial, a Grande Depressão e a Industrialização Brasileira", *Revista Brasileira de Economia*, Março.
- \_\_\_\_\_ (1971), "As consequências econômicas da ortodoxia monetária, cambial e fiscal no Brasil entre 1889-1945", *Revista Brasileira de Economia* 25(3), jul./set.
- \_\_\_\_\_ (1972), *História da Industrialização Brasileira*, Rio de Janeiro: APEC.
- Rostow, Walt W.(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1978), *The World Economy: History and Prospect*, Austin and 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ilber, Simão Davi(1973), *Política Econômica, Defesa do Nível de Renda e Industrialização no Período 1929/1939*, Rio de Janeiro: Fundação Getúlio Vargas.
- Temin, Peter(1989),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The MIT Press.
- Thorp, R. ed.(1984), *Latin America in the 1930s: The Role of the Periphery in World Crisis*, New York: St. Martin's Press.

Villela, Annibal V. e Wilson Suzigan(1973), *Política do Governo e Crescimento da Economia Brasileira 1889-1945*, Rio de Janeiro: IPEA/INPES.